文대통령, 洪에 "초당적 협력"당부

洪 "남북대화 반대 안해" 김기식 등 국내 현안은 경청

문재인 대통령은 13일 자유한국당 홍준 표 대표와 단독 회동을 가졌다.

이날 회동은 청와대 본관에서 오후 2시 30분부터 오후 3시50분까지 1시간20분간 진행됐다. 대화 주요 의제는 남북 정상회 담과 한반도 정세였다.

홍 대표가 김기식 금융감독원장 시퇴, 대 통령 개헌안 철회 등을 요구했지만 문 대 통령은 답변을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

한병도 청와대 정무수석은 이날 오후 춘 추관에서 영수회담 사후 브리핑을 갖고 "문 대통령과 홍 대표는 오는 27일 남북 정상회담을 앞두고 외교안보 현안에 대해 허심탄회하게 대화를 나누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남북의 대화가 시작된 만 큼 야당의 건전한 조언과 대회는 바람직 하지만, 정상회담을 부정하는 것은 바람직 하지 않다"며 초당적 협력을 당부했다고 한 수석은 전했다.

이에 홍 대표는 "대화 자체를 반대하지 않는다"면서 "국가운명을 좌우할 기회인 만큼 과거의 잘못이 되풀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한 수석은 "오늘 대회는 남북 정상회담 등 외교안보 현안에 집중했으며 홍 대표 가 제기한 국내 정치 현안에 대통령은 주 로 경청했다"고 밝혔다.



한병도 정무수석이 13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 회동 결과 브리핑을 하고 있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과 단독 영수회담을 가진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는 "회담에 서 김기식 금융감독원장의 해임과 대통령 이 발의한 개헌안 발의를 철회해 달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홍 대표는 영수회담 직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 참석해 의원들에게 관련 내용 을 보고했다.

홍 대표가 문재인 대통령에게 요구한 사 안은 ▲북핵폐기 전제 남북·북미정상회 담 ▲완전 북핵폐기전 제제완화 반대 ▲ 한미동맹 강화 조치 ▲대통령 개헌안 발 의 철회 ▲김기식 금융감독원장 임명 철 회 ▲정치보복 중단 ▲홍장표 경제수석 해임 등 7가지다.

노회찬 "丁의장, 피감기관 부담 해외출장 전수조사를"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사진)는 지 난 13일 김기식 금융감독원장의 외유성 출장 논란과 관련해 "정세균 국회의장 이 직접 나서서 피감기관 비용으로 해 외출장을 간 사례를 전수조사 해야 한 다"고 요구했다.

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김 원장 파문은 급기야 국회 전체의 신뢰 문제로 확산

됐다. 지금까지 드러난 의혹이 모두 사실이라면 국회는 국민 으로부터 영업정치 처분을 받아야 하는 상황까지 왔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청와대가 19~20대 국회에서 피관기관 비용으로 출장 간 사례를 공개한 것을 두고 "이 소식을 청와대로부터 듣는 다는 것은 국회의원으로서 납득하기 힘들다"며 "국회의 문 제를 국회가 먼저 나서서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놓기 도 했다.

노 원내대표는 "국회 예산으로 출장 간 경우도 세금이 적 법하게 제대로 쓰였는지 국민이 궁금해 하고 있다"며 "이 부분도 엄격하게 조사할 것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국회의원 특권 타파 차원에서 해외출장 문화 자체를 근본 적으로 쇄신하는 국회법 개정안도 발의하겠다"고 했다.

그는 기자회견 직후 기자들과 만나 '국회의원 전수조사를 당론으로 채택하는지 여부'에 대해 "정의당 원내대표로서 요청하는 것"이라며 "필요하다면 당에서 더 논의해서 (채택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노 원내대표는 해외 출장 전수조사가 정쟁도구가 될 수 있 다는 지적에는 "정쟁이 두려워 진실을 덮어서는 안 된다"며 "지금처럼 각 당이 자기에게 필요한 것만 공개하는 방식으 로 싸우게 되면 정쟁의 늪에서 헤어나기 힘들다"고 반박했

그는 정의당은 외유성 출장 시례가 없다고도 강조했다. 그 는 "1차로 파악한 바로 부당한 해외출장은 한건도 없는 것 으로 안다"며 "단 정밀하게 조사할 것을 지시했다. 정의당에 해당되는 것은 다 공개하겠다"고 말했다. /뉴시스

"산은 역할 하면 군산공장 폐쇄 막을 수 있어"

최인정 의원, 1인 피켓시위

대기업 의존도를 낮 추고 도내 협력업체 를 이용한 중소기업 의 자립과 자강력을 높이자는 목소리가 나왔다.

전라북도의회 최인 정(군산3) 의원은 지 난 12일 산업은행 본

사를 찾아 1인 피켓시위를 펼치면서 "지금 부터라도 산업은행이 2대주주 역할을 제 대로 해낸다면 군신공장 폐쇄는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3년에서 5년동안 정부와 협 의해 군산공장을 한시적 재가동을 시켜야 군산공장과 600여 명의 일자리와 협력업 체 3만여 가족 그리고 군산의 소상공인 가 족들의 생계를 지킬 수 있는 물량을 확보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는 이 기간에 매각 또는 인수, 신성장 산업 등의 조치가 이뤄진다면 군산과 도 의 경제적 쇼크없이 연착륙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최 의원은 지난해 10월 18일 정부와 산 업은행에 한국GM 철수 대비와 실사·감 사를 통해 준비해야 한다는 내용의 결의 문을 도의회에서 대표발의하고 이를 만장 일치로 통과시켰지만, 아직까지도 산업은 행은 묵묵부답하고 있어 분통을 터트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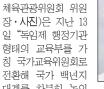
특히, 그는 지난달 한국GM 군산공장 폐 쇄 철회를 위해 산업은행이 지극히 한 일 이 없다면서 "16년간 실사나 감사를 단 한 차례도 실시하지 않았는데, 이제서야 한달 짜리 실사를 한다는 것에 의문스럽지만, 산업은행이 의지를 보여줘야 할 때"라고 강력한 목소리를 냈다.

또한 그는 "그동안 정부가 일자리 때문 에 산업은행이 대우해양조선과 STX조선 에 쏟아부은 돈이 15조원이지만, 군산공장 근로자 600명의 연봉 3년과 운영비를 합해 야 1천억원"이라며 "군산 경제를 위해 1천 억원 투자는 세수를 생각하면 반드시 협 상해야 할 충분한 가치가 있다."고 주장했

유성엽 "대입정책 공론화 다행"

"교육부, 국가교육위원회로 전환해야"

민주평화당 유성엽 의원(국회 교육문화 체육관광위원회 위원 칭 국가교육위원회로 전환해 국가 백년지 대계를 차분히 논의



하고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

유 의원은 이날 YTN 라디오 '출발! 새 아침'에 출연, 정부가 2022학년도 대입제 도 개편 시안에 대한 국민 여론을 수렴하 겠다고 밝힌 데 대해 "일방적으로 결론을 내리지 않고 충분히 공론화 과정을 거치 는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라며 이렇게 밝 혔다.

그는 "이번에 국가교육회의에다가 이것 (공론화 과정)을 맡겼는데, 국가교육회의 자체를 합의제 집행기관 형태로 삼는 것 이 필요하겠다는 생각"이라고 거듭 강조

정치권 일각에서 이번 교육부 결정을 가 리켜 6・13 지방선거를 의식한 책임회피 가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는 데 대해 유 의 원은 "4년 후 적용될 제도를 논의해서 정 해나가는 것이다."라며 "모든 것을 정치공 세로 보는 것은 궁색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유성엽 의원은 김기식 금융감독원 장을 둘러싼 각종 논란이 확대되는 것과 관련 "차라리 이렇게 된 상황에 300명 모 든 국회의원이 해외출장 갔던 내역을 국 민 앞에 떳떳이 공개하고 책임질 것을 책 임지자."고 제안했다.

/김진성 기자

정동영 "남북 군사적 대결 시대 종식 선언돼야"

민주평화당 정동영 의원(사진)이 "4.27 남북정상회담이 '우리는 더 이상 적이 아니다'선언하는 남북 간의 군사 적 대결 시대 종식 선언이 돼야한다. 고 주장했다.

정동영 의원은 13일 민주평화당 최고 위원 연석회의에서 "판문점 정상회담을 제2의 몰타선언으로 만들어야 한다."며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우

리가 더 이상 적이 아니다 라는 선언과 함께 이것을 뒷받침 히는 남북 기본조약을 국회에서 동의 받아 남북 기본협정 시대를 열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북미정상회담 장소로 "평양이면 좋고, 제3국보다는 제주도가 최적의 장소이다."고 주장했다.

정 의원은 "제주도는 경호, 의전, 통신, 또 회담의 환경 등 모든 것이 완벽하고, 북미정상회담 마무리에 문재인 대통령 이 자연스럽게 참석하여 남북미 정상회담으로 연결될 수 있 고, 경우에 따라서는 남북미중 정상회담까지 내다볼 수 있기 에 평양이 어렵다면 제3국보다는 제주도가 북미정상회담의 최적의 장소다."고 강조했다.

또 "4.27 남북정상회담 이후 북미정상회담에서 비핵화 문 제에 일정한 성과를 거둔다면 8월 2차 남북정상회담을 개최 하여 2007년 10.4 합의에서 합의한 24개 경제협력사업 추진 을 논의하는 것이 베스트 시나리오다."고 지적했다.

/김진성 기자

